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ing a Unifi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System in Korea

홍 현 진(Hyun-Jin Hong)**

노 영 희(Young-Hee Noh)***

목 차

- | | |
|--------------------------------|------------------------------------|
| 1. 서 론 | 3.2 국외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벤치마킹 사례조사 및 비교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3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분석과 시사점 |
| 1.2 연구의 방법 | 4. 정책정보서비스 중장기 발전 방안 |
| 2. 정책정보의 개념 | 4.1 기본요건 |
| 2.1 정책정보의 정의 | 4.2 추진전략 |
| 2.2 정책정보의 범위 및 서비스 대상 | 4.3 정책정보 수집전략 |
| 3. 정책정보 유통현황 및 정책정보서비스 실태조사·분석 | 4.4 정책정보 발굴 및 특성화 |
| 3.1 우리나라 정책정보의 유통체계 조사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국가 및 국민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조직의 복잡성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 및 자료의 생산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정부간행물을 수집하는 곳도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입안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식정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며, 정책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 체제 구현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Despite huge significance of public policy information to a country and its people, it seems that Korean government lacks a nationwide service that specializes in managing those information. Nowadays the 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very complicated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and data they are producing is massively growing. Naturally, without any advanced knowledge, it is not easy to find the information you want from the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Besides, government publications are scattered and not under control of unified collection. This study suggests an efficient policy information service model that can i) provide stepping stones for a competent knowledge-based government by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policy-making process in government ministries and public organizations, ii) build national policy information infrastructure by incorporating policy-related information dispersed over different ministries, and iii) identify new approaches to improve policy information services.

키워드: 정책정보서비스,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모형
National Policy Information Infrastructure

* 본 연구는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내용의 일부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jhong@chonnam.ac.kr)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Corresponding Author: irs4u@kku.ac.kr)

논문접수일자 2008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3월 25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책정보는 유일무이성, 전문성, 특정성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정책정보가 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정책정보에 개인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은 물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조직의 복잡성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 및 자료의 생산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정부간행물을 수집하는 곳도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부처 소속기관의 차이로 단일화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과학정책정보, 기업정책정보, 정부정보 등이 각각 다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거나 그나마 각 부처별로도 통합되지 못하고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하여 국가정책정보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과 국민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기관 자료실간 협력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책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정부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재되어 있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웹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접근점(access point)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는 소속기관의 차이, 제도적·법적 문제, 시스템 구축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USA.gov나 GPO(Government Printing Office) 등 대규모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정부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처간 소속기관이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구심점을 찾아낼 것인가가 관건이며 두말할 필요 없이 중심기관은 국내 주요 정보제공기관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입안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식정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며, 정책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 체제 구현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정책정보 유통현황 및 정책정보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책정보의 유형 및 유통체계를 조사하고, 다양한 주제분야의 정책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실태조사를 하고자 한다.

둘째, 국외 주요국가의 정책정보서비스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벤치마킹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정책정보서비스 운영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정책정보서비스 운영을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최종적으로 정책정보서비스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기관 자료실간 협력을 통한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 및 서비스 향상 방안과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책임질 기구와 연계 기관과의 기능 및 역할을 도출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의 모든 정책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정책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이고 단일화된 서비스 창구마련을 통해 지식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정부기관 소속 공직자의 정책입안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정책정보 유통 현황 및 정책정보서비스 내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정책정보제공 사이트를 폭넓게 조사하고 문헌조사를 하고자 한다.

둘째, 국외 선진국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 선진사

례를 조사·분석하고 국내 상황과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소속 자료실 4~5곳을 직접 방문하고 자료실의 현황을 직접 관찰할 뿐만 아니라 정책정보자료실의 운영자와 깊이 있는 면담을 통해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정부 각 부·처내 자료실의 정보전문가 및 정책정보유통 분야 전문가 4~5명을 자문으로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전문가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각 부처 내 자료실의 담당자 100여명을 초빙하여 공청회를 주최하고 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도록 하며, 연구결과와 현실성을 검증받도록 한다.

2. 정책정보의 개념

2.1 정책정보의 정의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계획 작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환경·체제, 그리고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정책정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정에 요구되는 정보인 정책정보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정보는 정책과정별 정보유형으로 분류할 때 행정정보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며, 시정의 현황이나 과제나 논점, 장래예측, 정책 방침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정 일반에 대한 판단자료가 되며, 시의 회의록, 자치단체의 단기계획, 예산의 개요, 결산분석, 각종 통계, 백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Rappaport(1975)는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에 쓸모가 있도록 구성된 자료이며 모든 목표지향적인 지식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였고, 강신택(1978)은 정책형성에 있어서 사용되는 자료 및 지식이라고 하였으며, 최봉기(1981)는 정책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항상 요구되는 정보라고 하였다. 이는 정책정보는 정책과정에서의 상황 분석, 대안발명을 위해서나 대안의 분석, 평가 및 미래예측을 위해서도 요구되며 정책집행과정 중의 통제 및 수정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대영(1984)은 정책정보란 정책결정에 쓸모가 있도록 처리된 자료를 포함하여 집행·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서 항상 요구되어지는 자료라고 하였다.

위의 정의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과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로 구성된 자료이며, 정책의 집행, 정책의 성과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서 항상 요구되어지는 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자료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는 일반인이 생성한 정책관련 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들 정보를 이용하여 정책결정자가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단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

성된 정보를 재가공·재분류하여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능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의 개념을 정책결정자가 정책입안, 정책 결정, 정책평가 등 정책 전 과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연구자와 일반 국민 등이 국내는 물론 세계의 정책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자 하며, 주로 정책 전 과정의 결과물인 산출물 중심의 정책자료를 정책정보로 한정하고자 한다. 즉 시의 회의록, 자치단체의 단기 계획, 예산의 개요, 결산분석, 각종 통계, 백서,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2 정책정보의 범위 및 서비스 대상

정책정보도 다른 일반적인 정보 분류와 마찬가지로 주제별, 유형별, 생산기관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유형정보와 무형정보로 분류하고 유형정보로 문서, 도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디스크 등을 분류하고, 무형정보로 구두진술, 회의내용 등을 분류할 수 있다. USA.gov의 경우 정책정보를 시민을 위한 정보, 사업 및 비영리를 위한 정보, 공무원에 위한 정보, 미국 방문자를 위한 정보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여러 해외 사례에서도 일정한 기준 없이 주제별로 분류하거나 나름대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정책정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정책정보자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집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모든 부처에서 발행되

는 모든 자료(국내외 정부간행물, 국내외 정책홍보자료(이메일 등을 통해서 제공 되는 자료 포함))

- ② 정책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자가 발간한 자료(정책관련 연구논문 및 연구제안, 정책관련 보고서)
- ③ 정책정보 관련 웹문서(정부부처 웹 사이트,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기관 웹 사이트(국제기구 사이트 등), 정책정보를 담고 있는 웹 사이트(기관·단체·개인 홈페이지))
- ④ 정책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국내외 정책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유·무료 포함), 국내외 정책정보 관련 부처의 서지 DB)

본 연구에서의 정책정보서비스 대상 이용자의 등급은 각 정부부처의 이용자 등급과 다소 다를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솔루션을 도입하여 정책고객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부부처의 정책고객 분류사례를 보면, 정책고객을 내부고객, 파트너 고객, 정책수요자 고객, 이해관계자 고객, 해외 고객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정책정보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고객을 분류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도서관임을 감안하여 정책정보서비스 대상 이용자의 구분을 일반 도서관 정보이용자를 구분하는 기

준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즉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대상자인 이용자를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단, 회원가입 여부(유·무료에 관계없이)에 따라 이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이후 정책고객기초자료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① 정책정보 생산 및 제공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한 종류의 정책정보 DB 구축에 참여한 모든 기관
 - 정책정보 DB는 다양하며 각 DB별 참여기관은 해당 DB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원문 DB구축에 참여하였다면 원문 DB까지 이용할 수 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된 모든 정책정보 DB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정책정보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법인 고객
 -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정책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내 모든 개인, 법인, 단체, 협회 등
 - 정책정보 DB 구축 참여기관, 즉 협약기관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된 정책정보 DB를 제외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책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특정 정책정보 DB 구축에 참여한 경우 해당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해외 국가에 소속된 정부기관, 개인, 법인, 단체 고객 및 해외 동포
 - 외국 정부기관, 외국 법인기업, 외국 단체/협회, 외국 개인, 해외 동포 등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정책정보 자료는 이용할 수 있다.
- 이 그룹은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이 제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3. 정책정보 유통현황 및 정책정보서비스 실태조사 · 분석

3.1 우리나라 정책정보의 유통체계 조사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통합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정책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물론, 이미 정책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민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분산되어 있는 관계로 이용상의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정보서비스, 국정홍보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정브리핑, 행정자치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인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Education Digital Library), 중소기업 정책정보전달시스템 등 제공하는 기관과 정보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정보시스템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유형 및 제공방법 등을 조사·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일원화된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사례조사는 정책정보 제공부분에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비교적 효과적으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심으로 하였다.

1)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11월 정책자료과를 신설하고 이를 주축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생산되는 공공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부의 정책활동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그리고 그 직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정보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비스의 추진목표는 각 부처별로 서비스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정책정보의 접근을 일원화하고 편리한 One-Stop 대국민 서비스 및 대정부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김명희 2005).

정책정보서비스의 기반 구축을 위해 첫째, 문화관광부 등 5개 부처 사서, 국립중앙도서관 부처담당자를 중심으로 정책실무위원회를 구축하고, 둘째,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서비스를 하였으며, 기관대출까지 운영하였다. 셋째, 정책정보의 기반을 이루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수집되는 정부간행물을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안정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전담사서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에서는 기관대출과 정책정보디지털참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관대출은 각 기관의 정책업무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기관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정책정보디지털참고서비스는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Education Digital Library)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에 한하여 원문(PDF형식)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원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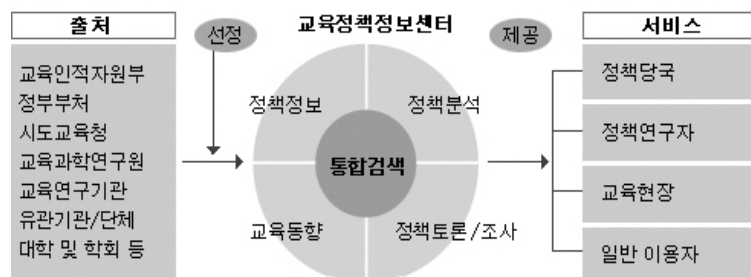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즉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배경을 보면, 첫째, 교육분야는 국민전체가 수요자이고, 특정 고객인 학생, 교원 등 직접 수요자만 해도 1,000만명이 넘는 등 교육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를 충족시킬 단일화된 창구가 필요했다. 둘째, 교육부에만 있는 과거 직제, 변천과정, 입시제도 변천사 등 교육정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기관별로 각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따른 중복 투자를 막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자료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질적·양적 효율성을 높이며, 넷째, 이를 무료로 일반에게 제공함으로써 지

역간 지식정보격차(knowledge divide)를 해소하기 위함이다(이재원 2005).

이 시스템의 수록내용을 보면, 교육개혁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의 보고서, 교육정책연구보고서, 교육과정 자료 등과 문교행정, 교육월보, 교육마당 21에 실린 기사 등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① 16개 시도교육청자료실자료 및 교육부자료실 통합목록, ②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국 발행자료, 교육과정자료, 교육정책 관련 석·박사학위논문, 시·도교육청 발행자료, ③ 문교행정·교육월보·교육마당 기사색인, ④ KERIC 등 교육연구기관과의 정책자료 공유, ⑤ 교육관련 학술 DB 등이다.

3) 교육정책정보센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교육정책 관련 자료의 통합검색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교육정책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즉 교육현안 및 정책연구결과, 동향 등에 대한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 판단, 연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센터의 정책정보서비스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교육정책정보센터 서비스 구성 체계

4) 환경부 지식정보센터

환경부 환경지식정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환경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17개 유관기관 정보자료실을 사이버상에서 통합하여 환경종합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원문과일은 물론 기관 간 상호대출 및 자료복사 서비스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부터 행정자료실의 재래식 자료수집 및 정보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서 정보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아래아한글, PDF 파일로 제공하던 원문의 서비스 방법을 개선하여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하였다. 메타DB검색엔진을 도입하여 각종 환경사이트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RSS채널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전자저널, U-Library(상용 전자책도서관), 상용도서요약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학술정보를 모든 환경부 기관들이 공동 활용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3.2 국외 정책정보서비스 관련 벤치마킹 사례 조사 및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각 나라에서는 정책정보자료 및 정부간행물을 어떻게 통합·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정책정보서비스 제공현황과 비교하고 국내 서비스의 개선방안과 정책정보서

비스 모형을 개발하는데 참고하고자 한다.

3.2.1 미국의 정책정보서비스

1) USA.gov

USA.gov는 부처간 갈등 및 예산부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탄생한 서비스로서 국내에서 정책정보서비스나 정부정보서비스의 단일화된 창구를 마련하는데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SA.gov는 미국정부의 행정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 일반사무행정부(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Office of Citizen Services and Communications)에 의해 경영되는 부처간 이니셔티브이다. 이 사이트는 미국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에 의해 예산지원을 받아 초기조사를 착수한 에릭브루워(Eric Brewer) 인터넷 사업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에릭브루워는 정부가 강력한 검색엔진(search engine)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미국정부는 정부 포털사이트를 열게 된 것이다.

2000년 6월 미 대통령은 에릭브루워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구인 연방조사기금(Federal Search Foundation)으로부터의 증여를 선언하였고, 그 후로 90일 안에 미국의 웹 포털이 개시될 것을 시사하였다. USA.gov는 2000년 9월 22일에 FirstGov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가동이 시작되었다. 일반사무행정부(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와 22개의 연방부처가 2001년과 2002년에 이 이니셔티브에 기금을 지원했다. 2002년부터 USA.gov는 미국의회로부터 연간 예산승인을 받고 있다. 2007년 1월 FirstGov는 공식적으로 현재의 USA.gov로 명칭을 변경하

였다.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USA.gov의 정책에 합당한 유용하고 시
간을 엄수하는 시민중심의 정부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의 링크
제공
- ② 웹 접근성, 자유로운 광고 다운로드, 프라
이버시 및 보안문제에 관한 USA.gov의
정책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내용 제공
- ③ 웹페이지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 가능한
데이터파일 형성 및 이용자 정보 및 편의
를 고려한 파일 제공
- ④ 5천만개 이상의 미연방정부 웹 페이지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부 부처 및 정부산하단
체,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웹사이
트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링크서비스
를 제공
- ⑤ 이용자 형태 및 주제별 디렉토리를 제공
하고 3년간의 무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충
분한 홍보기간을 가졌으며, 하나의 창구
를 통해 모든 민원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
는 역할

2) FedWorld.gov

FedWorld.gov 웹사이트는 미국 정부 정보
를 위한 게이트웨이로서 국가기술정보서비스
(NTIS: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
vice)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FedWorld는 전
자형태의 연방정부정보를 정부부처 및 대중에
게 지원하기 위해 미국 통상부 산하 부처인 국
가기술정보서비스(NTIS)에 의해 1992년에 설
립된 것이다. 설립목적은 연방정부에 의해 배
포되는 정보의 통합적 기록을 위한 온라인 위

치 서비스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주제별 정
부 포털 및 게이트웨이, 그 외 중요한 정부 웹사
이트, 정부간 각 부처 웹사이트, FedWorld 정
보 네트워크 사이트로 나뉘어 브라우징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3) US GPO

미국 정부인쇄국(US GPO)은 미의회가 모
든 미국인들에게 정부 활동에 대한 정보의 필
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1813년에 설립하였다.
의회기록 및 연방등기와 같은 국가의 주요 정
보생산물 중 상당수가 워싱턴에 위치한 GPO
(Government Printing Office)의 중앙인쇄소
에서 제작된다. GPO는 국가 전체에 있는 민간
기업 벤더들과 함께 하루에 600개에서 1,000개
에 이르는 인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GPO는 50개 주의 몇 천개에 이르는 민간기업
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다. 이는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조달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가장 비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일원화시
켜 한 군데서 발간·배포하는 GPO는 입법부
소속으로 별도의 법률에 의거하여 전국 1,300
여개의 도서관에 정부간행물을 무상으로 송부
하는 기탁도서관(depositary Library)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GPO 액세스(GPO Access)

GPO 액세스란 연방정부에 의해 제작된 중
요한 정보자료로의 자유 전자 이용을 제공하는
미국 정부인쇄국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 사이
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공식적이고 출판된 형

태이며, GPO 액세스로부터 나온 정보들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제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유 서비스는 연방기탁도서관프로그램(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다.

② 연방기탁도서관프로그램(FDLP)

연방기탁도서관프로그램(FDLP: Federal Depository Library Program)은 미국 대중이 정부정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FDLP는 보관자료의 습득, 형태변환, 배포 등의 업무에 관여한다.

FDLP의 사명은 전국 1,300여개의 도서관에 정부의 정보자료를 배포하는 데에 있다. 연방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들은 이러한 정보자료들을 유지·관리하게 되며, 이 자료들이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FDLP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GPO는 정부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개인지원을 제공한다.

4) GovSpot

미국의 GovSpot은 민영 기업인 StartSpot Mediaworks, Inc.사가 운영하는 정부정보 통합검색 포털사이트이다. GovSpot은 1999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웹에 존재하는 정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한 곳에서 정부 정보(Government Information)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 서비스 대상으로는 학생, 교육자, 기업가, 공무원 등 정부 정보를 찾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GovSpot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부에 대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으로서, 국립공원에 관한 정보에

서 의회 결의 자료까지 '가장 훌륭한 정부기관 웹사이트, 문서, 사실, 뉴스, 정치적 정보의 검색을 쉽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목표하고 있다. GovSpot은 기본적으로 야후와 같은 방식의 카테고리별 정보 제공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검색도 가능하다. 메인 페이지의 카테고리 분류는 뉴스, 도서관, 사회 서비스, 군정 관련, 금융, 과학/여행,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정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2.2 영국의 정책정보서비스

1) UK Government's Knowledge Network Program

영국정부 지식네트워크 프로그램(UK Government's Knowledge Network Program - KN)은 1997년 영국 노동당이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기술에서 유래한다. KN은 정부내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지식풀(Knowledge Pool)을 구성하고 이를 정부의 내부통신망인 정부보안인트라넷(Government Secure Intranet)을 통해 정책 관련 당사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식풀이 수행하는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특정주제에 대한 지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장소, 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지식풀에서 축적된 정보는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데스크톱(desktop)을 통해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UK 온라인 포털서비스를 통해 학계, 민간단체, 시민들에게도 개방,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박재희, 서성아 2001).

각 부의 장관들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식

네트워크 위원회(Knowledge Network Project Board)가 제시한 지식네트워크의 공식적인 목표는, i) 각 분야의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 축적함으로써 원스톱 방식을 통해 24시간 정부의 모든 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ii) 영역별 정책집행효과의 비교분석자료의 축적을 통하여 정책의 질과 집행효과를 제고하는데 있다.

위원회는 지식네트워크 운영효과로 i) 정책관련 핵심정보의 공유도 증가, ii)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적·인적 자원의 통합관리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 iii)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제공이 가능케 됨으로써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증가, 그리고 iv) 24시간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시시스템의 구현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i) 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정보에 대한 통제의 부족과 ii) 정책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대규모화로 인한 정보탐색시간의 증가 등을 들었다.

이러한 정책정보 및 지식폴의 개발은 정책·관리연구센터(CMPS)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자원부(Policy Resources Division)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2) 정책·관리연구센터(CMPS)

영국의 정책지원 조직은 정책·관리연구센터(CMPS: Center for Policy and Management Studies)를 비롯하여 정책연구부(PSD: The Policy Studies Directorate), 정책평가부서(PED: Policy Evaluation Division), 정책연구부서(PRD: Policy Research Division), 그리고 정책자원부서(PRD: Policy Resources

Division)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CMPS는 조직상 영국정부의 핵심부인 내각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지식공유문화의 육성, 실증자료에 입각한 정책만들기(evidence-based policy making) 등을 통하여 공공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현대화하고 혁신하는데 필요한 기술(skills)과 도구(tools)를 습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영국의 정부간행물인쇄국(HMSO)

정부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일원화시켜 한 군데서 발간·배포하는 HMSO(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는 1996년에 사유화되었지만 감독관(controller)은 왕실발간 간행물, 왕실소유저작권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1786년에 설립된 HMSO는 영국의 왕립인쇄소로서, 국가기록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대중부문 정보국(OPSI: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에서 시작되었다. HMSO는 의회의 출판사업 뿐만 아니라 의회 외의 정부간행물을 담당하고 있다. 1989년에 HMSO는 1665년 설립된 옥스퍼드 가제트(Oxford Gazette)에서 시작한 런던 가제트(London Gazette)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오늘날 가제트는 정부의 공식선언이나 법적 공고문을 제공하고 있다.

HMSO는 1996년 유통방식의 민영화에 따라 대중서비스책임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HMSO는 왕립저작권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공식 가제트와 법률 제정과 관련된 제작의 책임을 진다. 2005년 EU의 대중부문 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실행에 의해서 대중부문 정보 재사용 운영에 대한 법령 및

원칙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대중부문 정보국(OPSI)이 설립되어 오늘날 HMSO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OPSI의 설립과 상관없이 HMSO는 계속하여 존재하며 단지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임무이행에 대한 운영이 OPSI로 이관되었을 뿐이다.

4) 대중부문 정보국(OPSI: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¹⁾

OPSI는 HMSO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OPSI는 정보정책, 표준제정 장려의 중심역할을 한다. OPSI는 대중, 정보산업, 정부 그리고 정보 검색, 이용, 공유, 매매 등의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 10월에 국가기록관과 OPSI의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및 대중 부문의 정보정책 개발의 강력한 리더쉽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다. OPSI는 정보유통 활동에 대한 대중부문 정보소유 규정기관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방성, 투명성, 공정성, 특별감사, 그리고 도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설립된 정보공정유통계획(IFTS: Information Fair Trader Scheme)은 대중부문 정보의 재사용자들에게 그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OPSI는 또한 대중부문 정보소유에 대한 불만에 대한 조사를 행하기도 한다.

5) Direct.gov

Direct.gov는 영국 중앙정보부(Central Office of Information)에 의해 운영되며 영국 정부부

처의 정보를 제공한다. 여행안전정보 및 육아휴가에서 지역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이르는 넓은 분야의 정보를 다룬다. 이 사이트는 또한 증가하는 온라인 정부서비스를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필기시험 등록이나 자동차세 납부, 여권 갱신, 학생대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2.3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책정보서비스

1) Australia.gov.au

Australia.gov.au는 오스트레일리아정부가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식적인 게이트웨이이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사이트 외부에서 제작되거나 저장된 것들이며 저작권 등은 이 사이트가 아닌 정부 각 부처에 귀속된다. 만약 정부간행물이 필요하다면 Australia.gov.au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필요한 정부간행물에 대한 정보나 웹사이트, 출판담당부처에 대한 정보를 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재정부와 행정부에 의해 개발·관리되고 있다.

Australia.gov.au 웹사이트는 오스트레일리아정부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한다. 이 사이트는 총 800개가 넘는 오스트레일리아정부 웹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본 사이트를 통해 3백만 이상의 정부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2) www.gov.au

www.gov.au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전체 사이트의 정보관문(entry point)이다. 이 사이트

1) <http://www.opsi.gov.uk/>

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주정부를 위한 10개의 링크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모든 단계의 정부 및 정부 웹사이트에 걸쳐 모든 검색이 가능하고 모든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계속 개발될 것이다. 본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GOVERNMENT'이라는 아키텍처를 실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GOVERNMENT이란 정부부처의 온라인 위원회를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GOVERNMENT은 협력프로젝트로써 오스트레일리아 국민, 주정부, 지방정부 등에게 정부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2.4 그 외 나라의 정책정보서비스

1) 프랑스

프랑스 행정서비스의 공식 게이트웨이는 Service-public.fr이다. Service-public.fr 게이트웨이는 '정보사회 속의 프랑스를 위한 준비'라 알려진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본 웹사이트는 총리실과 행정서비스 및 주개편부(State Reform Ministry)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서 프랜차이즈(Documentation française)에 의해 설립되었다.

전체적인 행정서비스는 Service-public.fr의 제작과 관련이 있다. Service-public.fr은 주 개편을 위한 부처간 대표들에 의해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각 장관들과 지방 행정 서비스가 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Service-public.fr의 개발에 참여한다. Service-public.fr의 설립목적은 자국민이 모든 행정적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스위스

www.admin.ch는 스위스 연방당국과 그 기

능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7개의 주정부 부서 및 연방정부 사무소의 링크가 제공되며 연방법관, 의회, 그리고 연방법원으로의 링크도 찾아볼 수 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이 정부 및 행정의 주요과제가 됨으로써 시민들은 적절한 시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본 사이트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갱신 및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마어를 사용하는 스위스의 다언어적 문화에 의거하여 본 사이트의 내용은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언어로 열람이 가능하고, 다섯 가지의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도 있으며, 일부 정보는 영어로도 제공된다.

3) 뉴질랜드

newzealand.govt.nz는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지방협의회 그리고 커뮤니티 기구에서 제공된 정보 및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이 사이트는 주정부 서비스 위원회와 뉴질랜드 정부부서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부서 및 지방협의회는 메탈로그(Metalogue)라 불리는 전자 카탈로그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메타데이터의 정형화된 형태는 뉴질랜드 정부 로케이터 서비스 메카데이터 기준(New Zealand Government Locator Service(NZGLS) Metadata Standard)이라고 불린다. 정부가 메타데이터를 확인한 후 이 데이터들을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으로 검색을 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4) 네덜란드

Overheid.nl은 네덜란드 정부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중앙 웹사이트이다. Overheid.nl은 인터넷 상에서 네덜란드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및 정부문서를 찾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모든 정보는 네덜란드어로만 제공이 된다. 정부기관 뿐 아니라 도서관, 학교, 의료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웹사이트가 운영된다.

본 사이트는 왕정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와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이니셔티브이다. Overheid.nl의 목적은 온라인상으로 가능한 네덜란드 정부의 모든 정보를 간단하고 믿을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Overheid.nl의 운영은 Overheid heeft Antwoord©가 담당한다. 이 웹사이트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네덜란드 정부 웹사이트'는 관광, 통상, 문화와 같은 주제별 웹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한다.

5) 스웨덴

www.sweden.gov.se는 영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스웨덴정부와 정부부처의 사이트이다. 본 웹사이트는 현재 정부의 현장, 이니셔티브, 각 부처의 활동,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도큐먼트, 기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www.sweden.gov.se에서는 키워드를 통한 간편 검색 및 고급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알파벳순의 브라우징을 통하여 정부 각 부처의 웹사이트로의 연결이 가능하다.

6) 일본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정책정보시스템은 제시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가 정책분야별로 매우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해당분야 정책수립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정보들로 채워져 있다(박재희, 서성아 2001). 일본 경제산업성의 정책정보시스템은 GUIDE시스템, 전용검색시스템, 전용편집시스템, 집계표작성시스템, 전용분석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정보의 검색, 가공, 분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는 정보는 산업성 및 관련 정부기관, 정부와 민간정보서비스기관(예를 들어 경제전문일간지, 제국데이터뱅크, Dialog Information Services, Inc. 등), 국제기구(UN, OECD, IEA, IMF, World Bank 등), 기타 산업단체 및 관련 연구단체 등으로부터 수집되고 있다.

3.3 국내외 정책정보서비스 분석과 시사점

1) 정책지원조직의 필요성

영국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강력한 정책지원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책관리연구센터(CMPS)를 비롯하여 산하기구인 PSD 등이 정부의 핵심부인 내각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행기능도 '통제' 보다는 부처 정책결정자들이 '실증자료에 입각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정보의 수집·생성·추적·제공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의 현 기능이 정책정보의 지원 기능보다는 심사평가를 통한 통제기능에 보다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2) 정책정보 DB의 체계화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무역대표부 DB 구축사례에 있어서는 지식정보 측면에서, ① 시스템 내 등록지식정보가 사용목적, 용도에 따라 매우 체계적으로 분류되어있고, ② 시스템에 올리는 지식정보의 치밀한 검증과정을 통하여 지식정보의 질 관리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③ 지식정보 마일리지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시스템 사용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 점 등이 주목해 볼만하다.

3) 정책실무위원회의 필요성

정책정보는 주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생산되며, 이러한 수많은 조직으로부터 생산되는 정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보수집대상기관의 핵심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해서도 이러한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UK Government's Knowledge Network Program의 경우 각 부의 장관들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식네트워크 위원회(Knowledge Network Project Board)를 구성하고, 영역별 정책집행효과의 비교분석자료의 축적을 통하여 정책의 질과 집행효과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4)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

UK Government's Knowledge Network

Program의 경우 정책정보 및 지식풀의 개발은 정책·관리연구센터(CMPS: Center for Policy and Management Studies)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자원부(Policy Resources Division)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CMPS는 조직상 영국정부의 핵심부인 내각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정보 개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5) 전담사서제 및 전문사서

정책정보의 기반을 이루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그리고 각 부처에서 수집되는 정부간행물을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안정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전담사서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이러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보 전문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부처담당 전담사서제를 운영하고 있다.

6) 정책정보제공기관 및 사이트에 대한 총체적 링크서비스

USA.gov의 경우 5천만개 이상의 미연방정부 웹 페이지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부 부처 및 정부산하단체,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웹사이트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FedWorld.gov도 미국 정부정보 게이트웨이로써 연방정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며, 브라우저를 통해 주요 정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주제별 정부 포털 및 게이트웨이, 그외 중요한 정부 웹사이트, 정부간 각 부처 웹사이트, FedWorld 정보 네트워

크 사이트로 나뉘어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www.gov.au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전체 사이트의 정보관문 역할을 하며, 이 사이트는 오스트레일리아정부와 주정부를 위한 10개의 관문 링크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관련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7) 정부간행물 전문출판국 및 기탁도서관프로그램의 운영

미국의 GPO Access는 연방정부에 의해 제작된 중요한 정보자료로의 전자 이용을 제공하는 미국 정부인쇄국의 서비스이다. 연방기탁도서관프로그램(FLDP: Depository Library Program)을 통해 전국 1,250개 이상의 도서관에 정부의 정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연방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들은 이러한 정보자료들을 유지관리하게 되며, 이 자료들이 대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영국에서도 정부간행물인쇄국(HMSO)을 통해 정부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일원화시켜 한 군데서 발간·배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8) 정책정보관련 모든 웹정보자원 DB구축

GovSpot은 웹에 존재하는 정부 관련 자원을 수집하여 한 곳에서 정부 정보(Government Information)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 서비스 대상으로는 학생, 교육자, 기업가, 공무원 등 정부 정보를 찾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4. 정책정보서비스 중장기 발전 방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해외 사례에 비해 국내의 정책정보 관리 및 이용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정책정보자료에 대한 통합서지 DB가 없고, 정책정보의 원문콘텐츠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입수정책이나 도서선정위원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의 정책정보유통구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기관 자료실간 협력을 통한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 및 서비스 향상 방안과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책임질 기구와 연계 기관과의 기능 및 역할을 도출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의 모든 정책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KIPIS: Korean Integrat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System(가칭))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정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정책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전략, 정책정보 발굴 및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 정립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를 국내외 사례를 들어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기본요건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정보를 수집, 관리, 공동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요건, 국립중앙도서관과 정부기관 및 정책관련 연구소 자료실간 협력을 위한 조직적인 측면, 정책정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 4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4.1.1 법·제도적 요건

정책정보를 포함한 지식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는 일반적 근거법령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도서관법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식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며,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및 정보화추진위원회,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그것이다.

특히 도서관법은 '공공기관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제20조에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행정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지식정보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서관정보정책위

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위의 모든 조항의 시행에 있어 강제성이거나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상업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되는 자료의 경우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라는 도서관법 2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간행물의 2~3% 정도밖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고 있지 않고 있고 정부간행물 번호도 간행물의 10% 정도만 부여받아서 출판하고 있다고 하였다²⁾. 그렇다면 나머지 97~8%의 정부간행물은 국제표준번호를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납본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예관법률, 제1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발간등록번호를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 정도만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즉, 90% 이상의 공공기관 간행물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 특히 공공기관을 포함한 비상업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간행물 자료실 면담결과 밝혀진 사실이며, 전체간행물 중 판매용으로 간행된 출판물만 ISSN 또는 ISBN번호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간행물의 10% 정도만 정부간행물 번호를 받고 있어서 정부간행물의 전체를 납본 받는 것은 사실은 매우 힘든 실정이다.

1) 강제조항 및 처벌조항

도서관법 제21조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을 두어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관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나 각 기관이 자료번호를 받지 않더라도 어떠한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자료번호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간행물번호 발행기관의 일원화

도서관법에서는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부여받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간행물번호는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간행물 발간자는 번호를 받기 위해 2종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 내에 공공기관의 간행물번호도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부여받도록 함으로써 간행물번호 발행기관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3) 납본시스템 개선 및 간행물번호 부여절차의 간소화

국제표준자료번호 신청절차 및 부여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또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곧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없는 자료의 발간부수를 늘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납본비율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한 번의 신청으로 간행물번호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동시에 부여받

을 수 있는 시스템 및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신청자가 인적사항, 발행기관 정보 및 간행물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한두 시간 이내에 온라인상에 간행물번호 및 국제표준자료번호를 공지하여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정보인 경우 체크를 해서 바로 전자자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번호센터의 조직 확대 및 인원 확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납본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부간행물의 수집비율을 90%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공공기관 간행물번호 신청부서의 일원화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간행물 번호 및 국제표준자료번호의 신청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간행물을 발간하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 자료번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그러나 앞서도 설명했듯이 국제표준자료번호 및 간행물번호 등록비율이 낮은 원인은 부서 직원의 잦은 교체와 행정직원의 간행물 및 자료번호에 대한 무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정보 수집 및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각 부처 및 기관 자료실에서 해당 기관 및 부처 자료에 대한 일관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배포도 자료실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자료실 등을 간행물 번호 및 자료번호 등록부서로 일원화하여 보다

3) 정부기관 소속 자료실 및 정보센터 담당자들과의 면담결과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2 조직기구 요건

국립중앙도서관·정부기관·정책관련기관의 자료실간 협력을 위해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수집부서가 새로 신설되거나 기존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수집조직을 담당관제로 운영하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 정책정보를 발행하는 국책연구소 담당, 민간연구소 담당 등으로 구분하며,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국제기구 담당자도 별도로 두도록 하며, 국제기구 기탁도서관 협령망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기구 자료 중 정책자료만을 간추리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장 전문가 면담과정에서도 담당 관제에 의한 체계적인 운영이 그 실효성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수집팀이 각 부처 및 단체의 자료실로부터 정보자료를 용이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장관 및 단체장들로부터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4.1.3 정책정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1) 국립중앙도서관 정책담당 전문인력 확충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력을 보면 정책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자료과 내에 정책정보서비스팀을 신설하고 새로 확장될 시스템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및 관련기관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정책정보서

비스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각부처 자료실의 정책정보담당자 배정 또는 인원확충

현장 방문 면담 및 공청회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각 부처 자료실의 인력현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료실이 1명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3명 이하인 곳이 80%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책정보담당자를 따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각 부처별로 자료실 담당자의 인원을 늘려서 정책정보 수집 및 제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4 정책정보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1) 정책정보 DB 구축 참여정도에 따라 예산의 차등지원

정부산하기관 및 관련부처 소속 자료실의 예산 현황도 매우 열악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해당 분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정보 DB 구축에의 참여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2) 정책정보 DB 구축비의 실제적 지원

또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보 수집비, 관리비, 운영비, 제공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각 부처 소속 자료실은 매우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전문도서관이며, 이들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정보원이 많이 있다. 따라서 자료실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발간될 자료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발간된 매우 가치있는 정보자원을 디지털화 하여 정보정책서비스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정책정보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새로운 수집전략이나 추가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정부기관의 자료실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료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기관의 자료실이 개선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 추진전략

4.2.1 대통령직속기관에 의한 추진

국내의 경우 각 부처별로 정책정보가 부분 통합되거나 아예 각 사이트별로 정부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며,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정보 등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부처간의 갈등으로 하나의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선진사례에서처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의 FirstGov 서비스는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문서(The President's Memo)로 작성하여 구축을 선언하였고 집행부는 단시일 내에 이를 실

행에 옮겨 시스템을 완성하였으며, 차기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었다.

즉, 최고명령권자의 의지, 집행부의 신속한 실행,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성 있는 정책 등이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서비스의 성공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장 전문가 면담과정에서도 대통령직속기관에 의한 추진이 매우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4.2.2 대표 전문정보센터 지정

정부기관 자료실 특히 정부부처 산하 자료실은 특정 주제분야에 매우 전문화된 주제전문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정보통합서비스 체제하에서 중앙부는 정책정보 기획·관리·검색서비스를 제공하되 산하에 전문분야별로 주제별 전문정보센터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 자료의 포괄적인 수집 및 DB 구축 등을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사실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담당 직원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린다 해도 각 산하단체까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정보센터를 지정하고 이 센터와 협력하여 각 산하단체의 정책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3 부처별 대표자 위원회

미국의 경우 FDLP 소속 정부문헌담당 전문사서 집단과 미국도서관협회의 한 분과인 GOVDOC Roundtable은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정부정보 및 문헌담당사서들로 구성되어 정보정책 감시 및 정책제안 등을 하는 기관들로 범정부적 서비스가 잘 이루어

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커뮤니티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성격의 커뮤니티가 우리나라에서도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정보통합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로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책정보서비스에 참여한 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정책정보통합제공에 한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정책정보수집에 있어서는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이기 때문에 두 위원회를 조직도 상의 협조기구로 활용하여 범정부차원의 정책정보 자료 수집 및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4 정책정보 성격, 범위, 대상 설정

공동활용의 대상인 정책정보의 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기관 등 중앙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물론 연구자 및 일반인이 생성한 정책정보도 산출물 중심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정책담당부서는 국내 모든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들, 국내외 민간연구기관 및 단체들, 주요 국제기구들의 중심에 서서 각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정책관련 자료는 모두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책정보제공기관 및 사이트에 대한 총체적 링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USA.gov의 경우 5천만개 이상의 미연방정부 웹 페이지

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부 부처 및 정부산하단체,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웹사이트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정책정보관련 모든 웹정보자원에 대한 DB구축을 해야 한다. GovSpot은 웹에 존재하는 정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한 곳에서 정부 정보(Government Information)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 서비스 대상으로는 학생, 교육자, 기업가, 공무원 등 정부 정보를 찾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4.3 정책정보 수집전략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계각층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정리, 저장하여 정책결정자가 필요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모든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들, 국내외 민간연구기관 및 단체들, 주요 국제기구들의 중심에 서서 각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관련 자료는 모두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수집될 정보의 종류도 정책정보 생산기관의 다양성 때문에 매우 다양할 것이다. 즉 정책연구보고서, 정책분석보고서, 선진국정책사례 및 해설자료, 각종 국제기구들이 발간하는 세계경제, 무역, 산업 동향보고서, 통계자료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메타데이터 개발을 통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정부기관의 활동현황, 국외 정부기관들의 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는 정부기관에서 정책결정을 하거나 행정업무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신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정책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그리고 이용현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타 다른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에 비해 소외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정보 DB를 구축함에 있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전략이 필요하며, 그 대상도 가장 기초적인 자료부터 시작하여 정책관련 연구정보 및 해외 정책정보로 점차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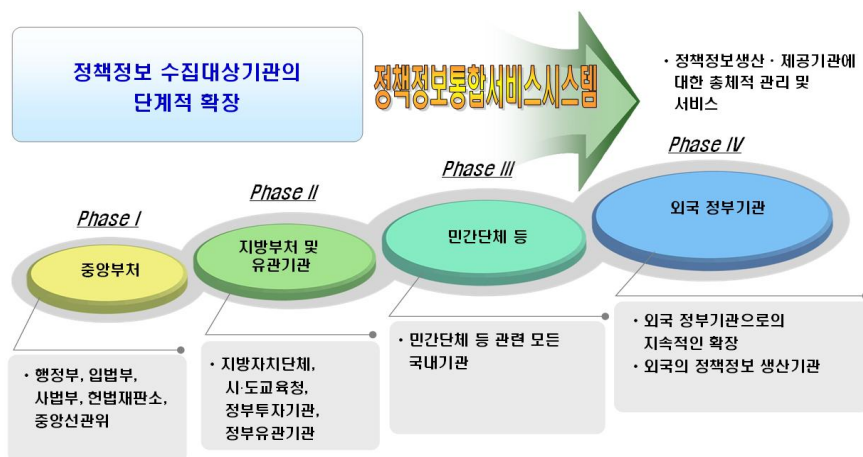
즉, 정책정보웹포털시스템 및 이후 건립될 국립디지털정부정책도서관을 통해서 제공될 정보자료의 성격, 범위, 서비스 대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책정보 수집대상 기관, 정책정보 수집자료의 범위, 정책정보 서비스 대상 등 각 부문에서 단계적인 확장이 필요하다.

4.3.1 정책정보 수집대상 기관의 단계적 확장

정책자료 수집대상기관은 1단계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고 점차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으로 확장하여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정책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개 가능한 자료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캐나다 정부간행물과 대만정부간행물은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정부간행물을 포함한 정책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2 정책정보 수집자료 범위의 단계적 확장

정책정보 수집대상 자료의 범위는 각종 기초 통계자료, 정책보고서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자료 등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주요 국제기구의 지식정보원은 물론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그림 2〉 정책정보 수집대상 기관의 단계적 확장



〈그림 3〉 정책정보 수집대상 자료범위의 단계적 확장

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정책정보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공한다고 해도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나 분석을 위한 연계를 위해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3 정책정보서비스 대상 및 등급 설정

정책정보서비스 대상은 정책정보교류협력에 참여한 모든 기관 및 단체를 일차적으로 포함하고 점차 그 서비스 범위를 모든 국민 및 전세계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보자료에 대한 서비스 등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USA.gov의 경우 정책정보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여러 가지 분류 및 주제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보, 사업가 및 비영리기관을 위한 정보, 공무원 을 위한 정보, 미국방문자를 위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이용대상 분류별로 대상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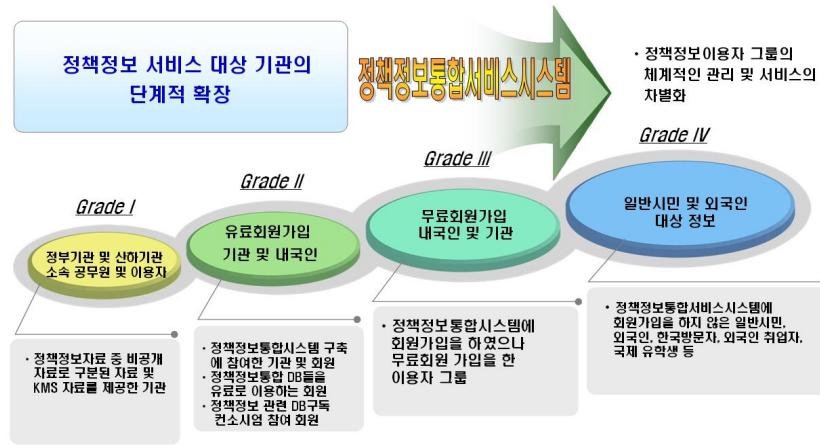
정책정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정

보이며, 정부부처 및 그 산하기관 소속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매우 관심을 가지는 주제분야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및 여러 한국적인 정책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도 정책정보 DB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수집된 모든 정책정보 자료에 대해 서비스 등급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PCRM 솔루션을 사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용자등급 구분과 이용 대상자료 등급 구분은 이후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 등급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도 4등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4 정책정보 발굴 및 특성화

4.4.1 정책정보로 특성화

국내에는 많은 정보자료유통기관이 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



〈그림 4〉 정책정보 서비스 대상 범위의 설정

국내 모든 간행물을 납본제도를 통하여 수집하고 DB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고, 국회도서관은 주로 입법자료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00여개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종합목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정보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화된 서비스나 기관을 찾을 수 없고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전산화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미약하나마 '정책정보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정보자재를 소장하기 보다는 소장하고 있는 기관 및 DB로 연결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빈그릇처럼 느껴지고 국내의 모든 정책자료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 2008년에 개발 예정인 정책정보웹포털시스템에서는 다른 사이트로의 연계는 DB통합이 어려운 사이트로 제한하고 각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지 DB는 물론 원문 DB까지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4.4.2 정책정보 종합서지 DB 구축

면담조사 및 공청회 결과, 자료실 실무자들이 정책정보를 수집하고 서비스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는 것이 정책정보 통합 서지 DB의 부재이고 가장 먼저 구축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로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실의 소장목록을 통합한 정책정보통합서지 DB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KN(Knowledge Network)은 영국 정부내 각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정책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지식풀(Knowledge pool)을 구성하고 있고, newzealand.govt.nz는 뉴질랜드 정부기관 및 지방협의회 그리고 커뮤니티 기구에서 제공된 정보 및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각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종합목록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전국대학교서관 소장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RISS 서비스가 있고,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KOLIS-NETWORK(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부부처 및 산하 기관, 유관기관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관련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보다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자료실의 소장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정책정보통합서지 DB가 구축될 것을 가장 우선 순위로 제안하는 바이다. 즉, 각 부처별 전문정보센터를 지정하고 각 전문정보센터에서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의 모든 정보 자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 후 각각에서 구축된 DB를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에서 통합하면 보다 용이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자료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즉 각 자료실의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자료는 유일무이하고 사회적·학문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할만한 가치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각 정부자료실이 정책정보를 디지털화 하고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그 원문을 정책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하게 하는 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4.3 정책정보관련 웹 정보자원 DB 구축

해외 정책정보 DB구축 사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웹상의 자료 중 정책정보관련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이었다. 미국의 USA.gov는 미국정부의 공식 정책정보관련 포털사이트로서 수많은 정부기관들 및 개인들의 노력으로 완성되었으며, 미국인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이들이 제공하는 정책정보는 시민중심의 정부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한 웹 사이트로의 링크 제공, 5천만 개 이상의 미연방 정부 웹 페이지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법·사법·행정부 부처 및 정부산하단체, 그리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웹 사이트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USA.gov는 미국정부에서 운영하지만 GovSpot은 민영기업인 StartSprt Mediaworks, Inc.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웹에 존재하는 정부관련 자원을 수집하여 한 곳에서 정부 정보(Government Information)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주 서비스 대상으로는 학생, 교육자, 기업가, 공무원 등 정부 정보를 찾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GovSpot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정부에 대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으로서, 국립공원에 관한 정보에서 의회 결의 자료까지 '가장 훌륭한 정부기관 웹사이트, 문서, 사실, 뉴스, 정치적 정보의 검색을 쉽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stralia.gov.au는 오스트레일리아정부가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식적인 게이트웨이이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자료는 사이트 외부에서 제작되거나 저장된 것들이며 저작권 등은 이 사이트가 아닌 정부 각 부처에 귀속된다. Australia.gov.au 웹사이트는 오스트레일리아정부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역할

을 한다. 이 사이트는 총 800개가 넘는 오스트레일리아정부 웹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로의 링크를 제공한다. 또한 본 사이트를 통해 3백만 이상의 정부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www.admin.ch는 스위스 연방당국과 그 기능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7개의 주정부 부서 및 연방정부 사무소의 링크가 제공되며 연방법관, 의회 그리고 연방법원원의 링크도 찾아볼 수 있다.

선진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국내에는 우리나라 모든 정부부처를 한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으며, 정책관련 모든 정보 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도 없다. 즉,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사례에서 보듯 5천만개에서 3백만개 이상의 사이트에 이르는 정부 사이트 및 정책정보관련 사이트에 대한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정책정보서비스는 매우 뒤쳐진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정책정보 관련 웹 정보자원 DB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 DB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웹 사이트 정보를 DB로 구축함으로써 정부와 연결될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우리나라 모든 정부부처의 구조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소재, 연락처, 설립목적,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제공 정보원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책정보자료 제공 웹사이트 DB

웹에 존재하는 정부 관련 자원을 수집하여 한 곳에서 정부 정보(Government Information)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정부 기관 이외의 사이트, 문서, 사실, 뉴스, 정치적 정보 등을 통합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으로 기업이나 대학, 민간 연구소, 학자, 연구자, 개인에 의해 작성된 사이트가 될 수 있다.

3) 각 부처 정책홍보 DB

정책정보에는 이용자가 알고자하는 정보가 있고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정부가 알리고자 하는 정보는 정책홍보자료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각 부처에서는 각 부처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방문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책홍보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하거나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정책홍보자료를 총체적으로 취합한 후 주제별, 유형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제공함으로써 정책홍보자료에 대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4) 해외 정부기관 웹사이트 DB

국내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해외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DB도 점차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www.admin.ch나 USA.gov의 경우 정부부처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정책정보 DB로의 연계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그 외의 나라들에 대한 핵심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4 국내외 정책정보 DB의 통합검색지원 및 연계

해외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각 나라에서는 정부주도 혹은 민간주도로 정부관련 부처에 대한 정보, 각 정부관련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 정책관련 웹사이트 DB 구축·제공 등 정책정보와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원이 많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정책정보종합서지 DB구축 및 정책정보관련 웹 정보자원 DB를 구축하는 이외에 국내외에 잘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정책정보 DB가 통합검색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Z39.50을 이용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정보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사이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1) 국내 정책정보 DB와 통합검색 및 연계
국내에는 이미 정책정보 DB를 나름대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다. 앞장의 국내 사례에 나타난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교육정책정보센터, 환경부 지식정보센터 외에 정책연구용역과제 정보 PRISM, 국정브리핑 등 다양한 기 구축된 정책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유관기관자료의 통합검색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체계를 구축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2) 해외 정책정보 DB와 통합검색 및 연계
해외의 정책정보서비스는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관 및 DB와의 통합 검색 또는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정보의 공식 정책정보 포털사이트인 USA.gov는 5천만개 이상의 미연방정부 웹페이지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GPO는 미국의 주요 정부간행물의 대부분을 출판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KN 및 CMPS, HMSO, Directgov,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Australia.gov.au 등 기타 여러 나라에서 제공되는 정책정보 사이트 및 DB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공할 콘텐츠가 부재할 경우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제분야별로, 이용자별로 또는 유형별로 세분화 시켜 각종 DB를 구축하되 원문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4.5 정책관련 유료 DB 컨소시엄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정책정보관련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발굴하여 회원기관 중 유관기관 및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하는 자료실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독함으로써 협력의 효과 및 예산 절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4.6 국제기구 기탁도서관 협력망

국제기구로부터 기탁을 받는 국내기관을 모두 연계하여 '국제기구 기탁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한다면 국제기구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국제기구의 정책이 세계적인 정책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각 주제분야의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 기탁도서관간에 연계 협력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제기구 자료들의 공동활용 및 상호대차 활성화 등을 통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절약이 가능하며, 국제기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DB를 연계서비스 하거나 통합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국가 및 국민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책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정책정보를 총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조직의 복잡성과 엄청난 양의 데이터 및 자료의 생산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정부간행물을 수집하는 곳도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책입안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식정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국가적 차원으로 통합하여 국가 정책정

보 인프라를 구축하며, 정책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정책정보서비스 체제 구현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국외 선진국에서는 정책정보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국내 상황 및 사례와 비교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정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지원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정책관리연구센터(CMPS)를 비롯하여 산하기구인 PSD 등이 정부의 핵심부인 내각에 설치되어 정책정보의 수집·생성·축적·제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 2) 일본 경제산업성과 미국무역대표부 DB 구축사례처럼 정책정보 DB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정책정보는 주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생산되며, 이러한 수많은 조직으로부터 생산되는 정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보수집대상기관의 핵심구성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되어야 한다.
- 4) 정책정보 발간·배포를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한다.
- 5) 각 부처에서 수집되는 정부간행물을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안정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전담사서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이러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정보

- 전문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정책정보제공기관 및 사이트에 대한 총체적 링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USA.gov의 경우 5천만개 이상의 미연방정부 웹 페이지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7) 정부간행물 전문출판국 및 기탁도서관프로그래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8) 정책정보관련 모든 웹정보자원 DB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정책정보의 전문성 및 포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9)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공직자 커뮤니티 시스템, 통합정책검색시스템, 분야별 정책아젠다, 온라인 상담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둘째, 전문가 면담 및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기관 자료실간 협력을 통한 국가 정책정보 인프라 및 서비스 향상 방안과 정책정보서비스를 위한 협력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책임질 기구와 연계 기관과의 기능 및 역할을 도출해 냄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의 모든 정책정보를 통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KIPIS: Korean Integrated Policy Information System(가칭)) 모형을 제안하였다. 통합정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정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정책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전략, 정책정보 발굴 및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관계 및 역할 정립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를 국내

외 사례를 들어 제안하고 있다.

- 1) 통합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정책정보를 수집, 관리, 공동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요건, 국립중앙도서관과 정부기관 및 정책관련 연구소 자료실간 협력을 위한 조직적인 측면, 정책정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 4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2) 추진전략으로 대통령직속기관에 의한 추진, 대표 전문정보센터 지정, 부처별 대표자 위원회 운영, 정책정보 성격, 범위, 대상 설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 3) 정책정보의 수집전략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 모든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들, 국내외 민간연구기관 및 단체들, 주요 국제기구들의 중심에 서서 각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정책관련 자료는 모두 수집하되, 정책정보 수집대상 기관, 정책정보 수집자료의 범위, 정책정보 서비스 대상 등 각 부문에서의 단계적 확장 방안을 제시하였다.
- 4) 정책정보의 발굴 및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책정보로 특성화된 시스템, 정책정보 종합서지 DB 구축, 정책정보관련 웹 정보자원 DB 구축, 국내외 정책정보 DB의 통합검색지원 및 연계, 정책관련 유료 DB 컨소시엄 구축, 국제기구 기탁도서관 협력망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정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해당되며 앞으로 정부

간행물을 포함한 정책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정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상의

제한 및 정책정보 기초연구과제인 관계로 정책정보서비스 중장기 로드맵까지 작성하지는 못했다. 이후 연구에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정보원을 발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및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단계적인 수집 로드맵도 수립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신태. 1978. 『정책학개론』. 서울: 법문사.
- 국립중앙도서관. 2006.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전략 기본계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명희. 2005.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계획과 전망.” In 국립중앙도서관. 2005. 정책정보서비스 운영방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47-56.
- 박재희, 서성아. 2001. 『정책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韓國行政研究院.
- 이대영. 1984. 『정책학개론』. 서울: 고시계사.
- 이재원. 2005. “교육정보디지털도서관 구축사례.” In 국립중앙도서관. 2005. 정책정보서비스 운영방안.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5-28.
- 이희선, 윤상오. 1996. 정책정보의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6(1): 85-110.
- 최봉기. 1981. 政策情報의 機能과 價値評價. 『한국행정학보』, (15): 157-172.
- 한규인. 1989. 『정책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개발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崇實大學 學校 大學院: 行政學科.
- 홍현진, 노영희. 2006. 『국제기구 지식정보원의 이해와 활용』.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Fletcher, P. D. 2003. “Creating the Front Door to Government: A Case Study of the FirstGov Portal.” *Library Trends*, 52(2): 268-281.
- Helfer, D. S. 2003. “The Government Battle over Printing: OMB versus GPO and why it matters to libraries and the public.” *Searcher*, aa: 53-55.
- Hernon, P. and C. R. McClure. 1988. “GPO Depository Programs: Building for the Future,” *Library Journal*, 113: 51-60.
- Notes, G. R. 2003. “Governmen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Library Trends*, 52(2): 256-257.
- Rappaport, Alfred, ed. 1975.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Quantitative and

- Behavioral Dimension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Stowers, G.N.L. 2002. The state of federal Website: the pursuit of excellence. Arlington, VA: The Pricewaterhouse Coopers Endowment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cited 2007.08.25].
 <<http://www.businessofgovernment.org/pdfs/StowersReport0802.pdf>>.
- USA.gov. [cited 2007. 8. 22].
 <<http://www.usa.gov/index.shtml>>.
- FedWorld.gov.
 <<http://www.fedworld.gov/index.html>>.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GPO).
 <<http://www.access.gpo.gov/index.html>>.
- UK Government's Knowledge Network Program(KN).
 <<http://www.knowledgenetwork.gov.uk/>>
- Directgov.
 <<http://www.direct.gov.uk/en/index.htm>>.
- Australia.gov.au.
 <<http://www.australia.gov.au/>>.
- <www.gov.au <http://www.gov.au/>>.
- Service-Public.fr.
 <<http://www.admifrance.gouv.fr/etranger/english.html>>.
- www.admin.ch.
 <<http://www.admin.ch/index.html>>.
- newzealand.govt.nz.
 <<http://newzealand.govt.nz/>>.
- Overheid.nl.
 <<http://www.overheid.nl/english/>>.
- www.sweden.gov.se.
 <<http://www.sweden.gov.se/>>.
- 교육정책정보. [cited 2007. 8. 22].
 <<http://edpolicy.kedi.re.kr/>>.
- 국립중앙정책정보서비스시스템.
 <http://www.nl.go.kr/policy/index2.php?sub_mission=1>.
- 국정홍보처. [cited 2007. 8. 22].
 <http://allim.go.kr/jsp/dataroom/dataroom_policy.jsp>.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Center/Edpolicy/Center1.php>>.

